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속도'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9개 항 권고안 합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여수산단 민관거버넌스위원회가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 9개 항의 권고안 추진에 합의했다.

전남도는 29일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전날 열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지난 22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이다.

거버넌스위원회는 또 2건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2차로 나눠 여수산단과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과제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 전문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의 실시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과업의 전반에 대해 검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건강 역학조사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된 환경부의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종합 평가 결과, 거버넌스의 1차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실효성있는 추진 방안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T/F팀을 구성키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에서 분야별 추천을 받기로 했다.

2019년 4월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조작 사건에 따라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가 출범, 올해 2월 9개 항의 권고안을 확정했었다.

전남도는 권고안 중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 기업과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도 4회에 거쳐 협의를 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중재안을 기업 측에 제시했고 기업 측은 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여수산단 내 기업의 환경실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대기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 구축 등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는 지난 28일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강기정 前수석 '호남 7대 대선공약' 제안

대선 후보 캠프 전달…광주시장 출마 채비 본격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공약 채택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더큐브정책연구소(소장 김준하)가 전날 주최한 '더큐브 4차 온라인 상생포럼'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점은 광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발제에서 7대 대선공약으로 ▲중입자 가속기 도입과 메디컬시티 ▲22세기형 디즈니랜드 ▲인공태양과 그린수소 미래 인재 양성 ▲아시아데이터터미널과 국가데이터센터 2단계 ▲국가 3대 환경산업 기후대기클러스터 ▲대한민국 4대 공항과 1천만평 공항도시 ▲호남 HTX 수소광역급행망 추진을 발표했다.

강 전 수석은 "호남은 인구가 적고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큰 꿈조차 갖지 못했다"며 "꿈을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꿈꾸는 도시, 꿈이 실현되는 '꿀잼'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7대 공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대선공약 제안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 채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큐브정책연구소는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기치로 2017년 출범한 후 교수·연구자 210여명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관으로 성장해 활발한 포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 공공기관 국감 내달 7일 시작

15일 전남도 등 4곳 현장국감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라 지역 상당수 기관이 국회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가운데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는 현장 국감이 진행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0월 7일 여수·목포 해양수산청, 서해어업관리단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이 국감을 받는다.

▲8일 광주고법·광주지법, 광주고검·광주지검, 광주지방기상청 ▲12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 KPS ▲1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1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18일 국립호남권생물지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19일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지역 현장 국감은 총 4곳이다. 10월 15일로 예정된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각각 도청 회의실과 전남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18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감이 광주국세청에서 열린다. /임후성 기자

"농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을"

道, 지방 고용률 40% 상향 건의

전남도는 29일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해 인력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어선원의 경우 2021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형일자리 성공·확산 공공기관 적극 협력"

李시장,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신규 역점 사업 공유

광주시는 29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회의에 이어 격월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현안 업무 추진과 함께 광주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내년 중점 추진할 47개 신규·역점 사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공유된 기관 별 주요 사업은 ▲광주형 평생주택 본격 추진(광주도시공사) ▲사람중심 GRTC형 ESG경영 가속화(광주도시철도공사) ▲제2전시장 건립 본격화(김대중컨벤션센터) ▲빛고을 50+센터 개관·운영(복지연구원) ▲예술인 보듬·소통 센터 운영 강화(광주문화재단) ▲인공지능사관학교 확대 운영(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만의 건축 예술프로젝트 '광주폴리Ⅴ' 추진(광주비엔날레)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인사 혁신 지속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성공에 적극 협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인사 혁신과 관련, 이 시장은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해 산하기관 채용관련 잡음이 근절됐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채용되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는 업무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직원이 승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하면서 첫 생산 차량인 캐스퍼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고비용 저효율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해법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에 전 산하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지 기자

전남도-아이쿱생협 'COP28 유치' 협약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과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성공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정희 아이쿱생활협동조합 회장, 오성수 구례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협의체 대표, 이현창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이쿱생협은 오는 10월부터 플라스틱 생수병 저감을 위해 출시한 종이팩 생수 기픈물 박스 20만개에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를 넣어 홍보에 참여한다. 또 전국 243개 자연드림 매장에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배너를 설치, 30만 조합원·매장 이용객이 서명운동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아이쿱생협에서 추진하는 'No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도 차원에서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정 및 사업 추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정 기자

CMYK